

코리아연구원 특별기획 제27호

## 하토야마시대 일본과 동아시아, 전망 및 제언

### 기획 취지

54년 장기집권한 자민당정권이 붕괴되는 ‘선거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하토야마의 민주당은 중의원선거에서 과반수(240석)를 넘어 308석을 획득해 압승했고, 사민, 국민당 등과 연립 및 제휴할 경우 절대과반수 의석(2/3, 320석)을 넘는 322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리아연구원은 일본총선에 대해 평가하고, 미국, 중국 그리고 한반도 관계에 대해 전망하고 제언합니다.

(\*\*\* 프레스안과 공동 게재합니다.)

[1] 2009년 일본의 선거혁명과 ‘새로운 일본’ (양기웅, 한림대 교수) <8/31>

[2] 민주당 신정권의 등장 의미와 새로운 한일관계 (이원덕, 국민대 교수) <9/2>

[3] 일본민주당의 외교적 선택: 미일동맹에서 동아시아외교로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9/11>



## 2009년 일본의 선거혁명과 ‘새로운 일본’

양기웅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 I. 선거혁명
- II. 정권교체
- III. 체제 변화
- IV. 정책 변화
- V. 정국전망
- VI. 이념충돌

### I. 선거혁명

일본에 드디어 ‘선거혁명’이 일어났다. 하토야마 민주당 대표가 내걸은 이번 선거의 키워드는 ‘혁명’이었다. 그리고 선거결과는 ‘혁명적’이었다. 민주당은 2009년 8월 30일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수인 240석을 훨씬 뛰어넘는 308석을 획득했고, 정책차원에서 연립과 제휴가 가능한 사민, 국민당 등의 의석을 합치면 절대과반수 의석(2/3)인 320석을 넘는 322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54년만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8월 29일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던 하토야마 대표는 ‘혁명적인 파도를 느꼈다. 메이지 유신 이후 가장 큰 변혁을 스스로 이루어내겠다는 큰 태동을 강하게 느꼈다’고 감격적인 소감을 드러냈다.

한편, 자민당은 1955년 창당 이후 처음으로 역사적인 패배를 경험했다. 선거 전 300석이던 중의원 의석은 선거 후 119석(소선거구 64석, 비례대표 55석)으로 줄어들었고 전임 수상, 당간부, 파벌영수 등도 대거 낙선했다. 지금까지 자민당이 경험했던 기록적인 패배는 1993년이였다. 선거전에 하타(羽田孜)、오자와(小沢一郎)가 탈당하여 자민당이 분열되면서 비자민 8당파에 의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기록적 패배였던 93년조차 자민당의 중의원 의석은 223석이였다.

이번의 정권교체는 오랜 시간동안 준비되어 왔다. 보수색이 강한 하토야마와 시민운동가 출신의 칸나오토 대표대행(菅直人)은 1996년 정권교체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민주당을 창당했고, 98년에는 오카다 간사장 등을 영입하여 지금의 민주당으로 발전했고 2003년에는 오자와 전 대표가 합류했다. 2006년 오자와 대표를 중심으로 지금의 트로이카 체제로 당의 결속력을 높인 후 2007년 참의원선거 제1당이 되어 여야당 역전을 이루었고 2009년 8월 30일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하여 대망의 정권교체를 실현시켰다.



## II. 정권교체

이번 선거는 버블경제 붕괴 이후 계속되는 최악의 경제침체, 5.7%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 급증하는 국가채무,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능력의 부족, 관료주도 사회에 대한 피로와 불만, 고이즈미식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후유증으로 나타난 빈부격차의 심화, 자민당의 부정부패와 무능 등에 대한 복합적인 심판이었다.

결과적으로 고이즈미의 개혁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2005년 총선에서 고이즈미(小泉純一郎) 당시 총리는 우정(郵政) 민영화 등 각종 개혁 조치를 내걸면서 여당이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는 대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 같은 자민당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빈부격차를 확대시켰고 서민들의 상실감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게다가 작년 가을 이후 세계경제를 강타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회복조짐을 보이던 일본경제에 다시 충격을 가한 것도 이번 선거 패배의 한 원인이다.

## III. 체제 변화

이번 선거는 체제 변화의 의미도 지닌다. 자민당 체제는 쇼와 시대(昭和-히로히토 일왕이 재위한 1926-1989년까지의 시대)를 이끌어 왔고, 이번의 선거는 자민당체제와 쇼와세대의 퇴장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혁명적’ 이다.

쇼와세대 일본은 일본제국주의, 패전, 전후의 경제기적을 경험한 세대였고, 자민당은 이들 세대를 기반으로 패전한 일본을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만들었고, 일본은 1980년대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 되어 미국 패권을 넘보는 위치에까지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자민당은 성장위주의 정책을 펼쳤고, 우수한 관료조직을 기반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했다. 보호주의적인 국내정책은 많은 이익단체를 자민당의 외곽조직으로 만들었고 보호받는 농민, 소상공인들은 자민당의 득표기계가 되어주었다.

그러나 1989년 히로히토의 서거와 함께 쇼와시대 자민당 체제는 사실상 끝났다. 일본경제는 버블 붕괴로 위기를 맞이했고, 한때 4만선이었던 닛케이종합주가지수는 6000선까지도 폭락했다. 자민당과 관료의 통치모델은 한계에 봉착했다. 자민당의 정치지도자들은 거둬드는 실책과 무능으로 경제는 살리지 못하고 세계최대의 국가채무만을 남겨놓았다. 고이즈미 개혁이 마지막 기회였지만, 고이즈미 정권의 개혁과 경쟁정책은 무한경쟁의 피로감과 빈부격차만을 심화시켰다.

민주당의 압승은 헤이세이(平成) 세대와 새로운 체제의 등장을 의미한다. 지금 일왕의 연호에서 유래하는 ‘헤이세이’ 는 일본의 전후 세대를 의미한다. 하토야마(鳩山由紀夫 62) 민주당 대표,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56)도 대표적인 헤이세이 세대이다. 이들은 일본제국주의와



침략전쟁을 모르고 전후 고도성장을 경험한 세대이다. 민주당 의원 가운데 세습의원 비율은 10% 안팎에 불과하다. 40-50대의 헤이세이 세대 유권자들도 성장 중심의 자민당 모델에 피로감을 느끼면서 ‘국민생활’ 중심의 민주당의 공약에 공감하는 세대이다. ‘출산수당 55만 엔, 아동수당 매년 31만 엔, 고령자 연금수당 7만 엔’ 과 같은 공약들은 헤이세이 세대의 청년층과 중년층, 그리고 소외된 쇼와세대인 노인층 모두에게 어필했다.

#### IV. 정책 변화

민주당은 수출 주도의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내수시장을 확대하려고 할 것이다. 7월 27일 발표된 민주당의 선거공약도 내수 확대와 관련이 있다. 중학생 이하 어린이에게 한 명당 월 2만 6,000 엔(약 34만 원)의 어린이 수당을 지급하고 농어민에 대한 소득보상제, 고속도로 무료화 등의 항목에 2010년도부터 4년간 총 16조8,000억 엔을 투입하겠다는 것, 최저연금제(7만 엔) 실시, 중소기업 법인세를 인하, 직업훈련생 수당(월 10만 엔) 등도 모두 생활경제와 내수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한 재원조달은 댐 건설 중지 등 불필요한 공공사업 지출 삭감(1조3,000억 엔), 국가공무원 인건비 20% 감축(1조1,000억 엔), 각종 보조금 삭감(6조 1,000억 엔), 소득공제 폐지 및 조세특별조치법 재검토(2조7,000억 엔)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4년간 세금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부족한 세수는 기업에 대한 과세 확충과 우정성의 주식 공개 등을 통해서도 보충하려 할 것이다.

대외정책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민주당 정권도 미일동맹을 일본외교의 기저에 놓고 있다는 점에서는 자민당과 마찬가지로이지만 미국과의 ‘대등외교’를 주장하면서 중국, 한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주일 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민주당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미국이 요구하는 지역에 대한 군사지원을 재검토하고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도 앞당길 예정이다. 또 아프간 전에 참가하는 미군에 대한 해상원유 공급은 시한이 만료되는 내년 이후 연장하지 않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중국과 한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토야마 대표는 한국과 중국이 반대한다면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하토야마 대표는 ‘아세안, 일본, 중국(홍콩 포함), 한국, 대만은 전 세계 경제의 4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아시아 통화 통합을 위해서는 여기에 필수적인 항구적인 안보 틀 구축에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V. 정국전망

집권 이후 민주당의 목표는 ‘93년 호소카와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는 것이다. 오자와의 말대로 정권교체는 목표가 아니라 시작이다. 하지만 민주당 정권의 앞날에는 어려운 과제가 산적해있다. 첫째, 그 중에서도 특히 정권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여 실행에 옮길 것인가가 관건이다.

둘째, 자민당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큰 과제이다. 자민당은 국정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당의 각종 정책, 특히 자민당의 주류인 극우파 의원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대미외교, 대아시아 외교, 대북정책 등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한 강도 높은 공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민주당이 참의원 단독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만큼 사민당, 국민신당 등 연립 또는 공조해야 할 야당과의 관계설정도 변수가 될 것이다. 보다 진보적인 사민당은 민주당과 대립할 가능성도 있다. 내년 7월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서 단독 과반수를 확보할 때까지는 다른 소수 정당과의 연립, 공조가 중요하다.

## VI. 이념충돌

하지만 민주당의 아시아 ‘우애’ 외교에는 보다 더 근본적인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부활하고 있는 민족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첫째, 헤이세이 세대는 전쟁과 군국주의의 공포를 기억하는 세대가 아니다. 이들은 일본의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보고 들으면서 그 과실을 향유해온 젊은 세대이다. 이들은 강한 자신감과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일본이 세계와 아시아에 기여한 만큼은 인정을 받아야 하고 일본은 그런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만약 헤이세이 세대의 인정(recognition) 욕구가 좌절되면 이들은 민주당의 아시아 우애외교에서 등을 돌리고 고립적 민족주의, 일국중심주의로 되돌아갈지도 모른다.

두 번째 도전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제침체이다. 장기화된 경제침체는 일본인들에게 심리적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 오랜 경제침체를 경험한 오늘의 일본국민들 중에는 미래의 삶의 질이 현재보다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 때 민족주의는 일본인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경제개혁의 추진력을 제공해준다. 만약 민주당 정권이 경제회복의 자신감을 일본국민에게 제공할 수 없다면 일본은 다시 자민당 시절의 보수주의와 일국번영주의로 회귀할지도 모른다.

세 번째 도전은 중국의 급부상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면서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국가가 되었다. 중국은 국방예산을 2003년 기준으로 과거 14년 동안 계속해서 두 자리 숫자로 늘려오면서 야스쿠니 신사참배, 센카쿠 열도 문제 등으로 일본과 때때로 긴



장과 대립의 관계를 연출하였다. 중국의 잠재적 안보위협 혹은 중국과의 지역패권 경쟁의식은 일본의 민족주의에 좋은 자양분이 될 것이다. 중국이 계속해서 일본에게 위협으로 인식된다면 민주당의 아시아 협력외교는 큰 국내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네 번째 도전은 북한 변수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납치문제는 일본의 안전보장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일본의 재무장과 보수우경화의 배경이 되어왔다. 따라서 민주당 정권이 만약 납치문제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아시아 우애외교를 국민에게 설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2009/08/31)





## 민주당 신정권의 등장 의미와 새로운 한일관계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 I. 자민당 정권은 왜 무너졌는가?
- II. 자민당 우월체제의 붕괴와 양당체제의 도래
- III. 관료주도에서 정치주도로 권력 이동
- IV. 한일관계에 청신호, 그러나 지나친 낙관은 금물

### I. 자민당 정권은 왜 무너졌는가?

전후 반세기 이상 동안 일본을 지배해 왔던 자민당 정권이 8월30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일으킨 광풍을 맞아 마침내 붕괴되었다. 일본 정치사에서 보면 이번 선거는 가히 혁명적인 일대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민주당은 480석 중에서 309석을 획득하여 1986년 중참의원 동시선거에서 자민당이 획득한 300석의 기록을 일거에 갈아 치우는 기염을 토해 냈다. 반면 자민당은, 그간 자신의 기초체력이라고 일컬어져 왔던 220석대에도 훨씬 못 미치는 119석을 얻는데 그쳐, 창당 이래 최대의 참당한 패배를 기록했다. 민주당의 역사적인 압승과 자민당의 괴멸적인 참패는 그야말로 일본정치의 기반을 뒤흔들어 놓는 선거 혁명에 다름 아니다.

민주당의 압승은 자민당 지도부의 실정과 무기력, 관료지배 체제의 폐단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성공을 거둔 것이며, 관료주의 타파, 격차사회의 시정, 지방분권의 실현 등을 공약으로 앞세운 민주당의 공세가 엄청난 약효를 발휘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이즈미 정권 이후 1년마다 총리를 교체하면서 무책임의 극치를 보이며 실정과 실언을 거듭해 온 자민당 정권으로서는 ‘생활정치 복원’과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과감한 복지정책의 실현을 기치로 내건 민주당의 전방위 공세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파벌정치와 세습의원의 구습에서 탈피하지 못한 채 동맥경화 상태에 빠진 자민당과 달리 민주당은 새로운 인물의 과감한 기용과 신세대 정치인의 수혈을 통해 확고한 정권담당 능력을 꾸준히 제고시켜 왔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이번 선거이변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진행되어 온 자민당 정권의 지지기반 하락 추세의 연장선에서 파악할 수 있다. 냉전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일본 정치권의 총





보수화가 진행되는 속에서 자민당은 자유주의 진영의 수호자 역할을 더 이상 독점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버블경제의 붕괴와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는 고도 경제성장을 견인하며 이익분배형 정치를 구현해왔던 자민당으로서는 더 이상 스스로의 지지 세력과 지지계층에 나눠줄 자원의 고갈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자민당 장기집권의 기반인 냉전과 고도성장 시대의 종언은 자민당 정치의 몰락을 초래한 구조적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 II. 자민당 우월체제의 붕괴와 양당체제의 도래

자민당의 참패와 민주당의 역사적인 압승으로 일본 정치권은 엄청난 변혁의 소용돌이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신 정권의 등장은 일본정치에 대대적인 변화와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도 변혁의 실마리는 정당 시스템의 재편과 관료주도 정치에 대한 개혁으로 가시화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민주당 정권은 격차 시정과 사회경제적 약자 배려에 중점을 둔 복지정책의 추진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자민당의 우월 정당제로 특징 지워지는 ‘55년 체제’는 마침내 이번 선거를 계기로 완전히 종지부를 찍고 그 대신 자민당-민주당 중심의 양대 정당 시스템이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년 여당의 역할을 담당해왔던 자민당은 사상 초유의 참패를 딛고 조직 재건과 세력 복원에 나서겠지만 당분간 혼돈과 좌절의 늪에서 탈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총선에서의 압승을 바탕으로 국내정치 분야와 사회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추구하면서 내년 여름 참의원에서의 승리를 위해 당력을 집중시킬 것이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일본의 정당 시스템은 자민당과 민주당이라는 양대 정당이 중심축을 형성하여 정권 획득을 치열하게 다투는 본격적인 경쟁 구도로 이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1994년의 선거개혁으로 기존의 중선거구 제도가 폐지되고 소선거구제(300석)와 권역별 비례대표제(180석)가 결합된 병립형 선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일본정당 시스템이 자민당 우월정당제에서 정권교체가 가능한 양당제로 재편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고되어 왔다. 이번 총선은 새로 도입된 소선거구제 하에서 다섯 번째로 실시된 선거로서 그야말로 소선거구제 제도가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정당별 득표율에서 보면 불과 20% 이내의 차이가 획득 의석수에서는 일방적인 승리를 가져다주는 것이 바로 소선거구제의 특징인 것이다. 이 제도 하에서는 상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른바 ‘무당과 층’의 투표 행동은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고 무당과 층의 선택이 바로 정권의 선택으로 직결되는 것이다. 2005년 고이즈미 전 총리가 주도한 자민당의 ‘우정선거 압승’도 따지고 보면, 무당과 층의 몰표 덕분이었고 그 무당과 층의 표심이 이번에는 민주당 압승의 원동력이 되었다.





### III. 관료주도에서 정치주도로 권력 이동

이번 민주당 정권의 출현을 계기로 일본정치는 관료주도에서 정치 주도로의 권력 이동이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자민당의 장기집권 하에서 고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왔던 관료제는 일본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거의 독점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국가예산의 편성에 서부터 산업 · 금융정책에 이르기까지 국가자원의 배분을 주도하는 한편, 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와 인허가권 그리고 행정지도를 통해 일본 관료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왔다. 관료가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갖는 일본적 시스템은 일본 국민에게 정치안정과 경제성장이라는 혜택을 선사해 주었다.

그러나 관료지배 체제는 동시에 수많은 폐단과 모순을 잉태하였다. 국가예산의 낭비, 관료 조직 상층부의 무분별한 아마쿠다리(낙하산 인사) 관행, 천문학적인 재정적자 그리고 무분별한 규제의 남발, 업계와의 유착과 부정부패를 양산하기도 했다. 민주당 정권은 향후 관료주도의 정치행태가 초래한 모순과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과감한 개혁 드라이브에 나서게 될 것이다. 민주당의 정권 공약은, 관료주도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 정치인과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는 국가전략국을 설치하여 관료 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와 통제에 나설 것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각 성청에 정치인 100명을 파견하여 관료조직을 단단히 다스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한 마디로 관료통제를 통한 정치주도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정치주도의 의사결정은 예산편성과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방침을 수립하는 데서 출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 정권의 정치주도를 실현하기 위한 개혁에 대해 관료조직은 조직적인 저항 내지 사보타지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과연 민주당 정권의 관료주도 타파가 어느 정도까지 성공할 수 있는지는 향후 일본정치의 핵심적인 아젠다가 될 것이다. 또한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건 각종 수당 및 보조금의 지급, 고속도로 무료화 등 재정지출을 요하는 사회경제 정책의 실현을 위한 막대한 재원의 조달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도 민주당 정권의 관료제 개혁 드라이브 성패를 좌우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 IV. 한일관계에 청신호, 그러나 지나친 낙관은 금물

이번 총선의 쟁점은 주로 국내정치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신 정권이 집권 후 외교안보 정책상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권 공약을 통해 대등한 대미관계의 추구하고 아시아를 중시하는 외교를 펼치겠다고 공언해 왔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에서의 외교정책 상의 기조 변화가 감지된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당 정권이 펼치게 될 한반도 정책에도 적지 않은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 조짐



이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민주당 정권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한일관계는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판단되며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시키는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자민당 정권의 수뇌부와는 달리 민주당의 지도부는 역사인식 문제에서 전향적이고 건전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군사문제나 헌법문제 등 외교안보 정책에서 다소 유화적이고 온건한 노선을 지향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최근 한일관계 악화 배경에는 일부 자민당 우파 지도자들의 시대착오적 역사인식이나 선부론 민족주의적 발상 그리고 부적절한 언행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민주당 정권의 출현을 계기로 한일 관계는 불필요한 마찰과 대립을 넘어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구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넓게 열려있다고 생각된다.

하토야마 대표는 ‘동아시아 공동체 수립’과 ‘아시아의 공동통화 구상’을 그의 아시아 중시외교의 비전으로 주장한 바 있다. 또 자민당 정권하에서 격렬한 역사마찰의 뇌관으로 작용해왔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중단하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더 나아가 그는 야스쿠니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제3의 국립추도시설 건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공약이 무난하게 실현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적어도 민주당 집권 기간 중에 야스쿠니 문제가 한일, 중일 관계의 외교적 악재로 등장할 가능성은 희박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 밖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정권공약과 선거유세,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하여 기대되는 언급을 표명한 바 있다. 첫째, 역사인식 문제와 관련하여 1995년 자민당-사회당 연립정권하에서 발표된 무라야마 담화를 답습, 공유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를 실천적으로 계승하겠다고 공언하였다. 둘째, 재일 한국인에게 지방 참정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셋째, 중군위안부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전후보상 문제에 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언급하였다.

민주당 지도부의 일련의 발언이 액면대로 실천에 옮겨진다면 한일관계의 최대 장애물 중 하나인 과거사 마찰 이슈는 상당 부분 약화되거나 해소되는 방향으로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한일 과거사 갈등의 불씨가 쉽사리 꺼졌다고 보기는 여전히 개운하지 않은 점이 남아 있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혁명에도 불구하고 일본정치의 보수적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민주당 내의 좌우에 걸친 다양한 이념 및 정책의 혼재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한일관계에 대한 과잉기대나 지나친 낙관은 시기상조라고 말 할 수 있다. 일단 야스쿠니 참배, 전후보상, 과거사 인식 문제와 관련한 정권 내의 반동적인 움직임은 민주당 정권 하에서 상당 부분 억제되겠지만 한일 간에 역사마찰이 재현될 가능성은 여전히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북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정권이 단시일 내에 새로운 대북 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에 대한 반발과 불신이 워낙 뿌리 깊을 뿐 아니라 북한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한 위협과 경계심이 일본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으로서도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의 대일 자세 변화에 따라서는 민주당 정권이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에 응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자민당의 대북제재 일변도 정책을 넘어서 민주당 정권은 새로운 대북 접근을 시도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수교협상의 개시에 물꼬를 트려고 나름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경우,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대북외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외무성 주도의 접근보다는 민주당 내의 거물 정치인의 결단이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일관계의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인 독도문제에 관해서 민주당 정권도 자민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자민당이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도서’로 규정한 것과는 달리 민주당은 ‘독도가 일본영토이지만 한국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접근 방식의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당장 독도문제와 관련해서는 올 가을 확정이 예정되어 있는 고등학교 교과서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다케시마 영유권’ 기술을 포함시키려는 문부과학성의 시도에 민주당 정권의 지도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우리로서는 긴밀한 대화 채널을 신속히 구축, 가동하여 민주당 정권이 이 문제를 슬기롭게 다뤄나가도록 다각도의 예방 외교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2009/09/02)





## KNSI 특별기획 제27-3호

# 일본민주당의 외교적 선택: 미일동맹에서 동아시아외교로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 I. 일본총선거와 외교안보쟁점
- II. 심리적 탈미(脫美): 미일동맹의 변화?
- III. 아시아중시 외교의 현실
- IV. 2010년과 한일관계

## I. 일본총선거와 외교안보쟁점

지난 8월 31일 일본총선거는 중의원의석 480석 가운데 무려 308석을 얻은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민주당은 2005년 총선거에서 얻은 115석에서 단숨에 193석이 늘어난 308석의 거대여당으로 등장하였다. 미국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오바마후보가 외친 ‘변화(Change)’ 구호는 일본에서 ‘정권교체’로 바뀌어 민심을 파고들었다. 일본의 유권자는 더 이상 자민당체제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하게 털고 일어나 정치적 변화를 요구하였다. 일본 역사상 첫 수평적 정권교체였고, 에도시대 이래 국가통제에 길들여져 왔던 일본국민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엄청난 용기이자 선택이었다.

1955년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당하여 자유민주당으로 출범한 이래, 집권 54년간 전후 일본을 이끌어온 자민당호는 300석에서 119석으로 1/3 가까운 수준으로 의석이 줄어든 채 주역에서 퇴장하였다. 스웨덴 사민당의 7070년 지배나 이스라엘 노동당의 장기집권 못지않게 세계에서 유례없는 장기정권이자 안정다수를 차지해 온 우월정당으로서 자민당 지배의 종말이었다. 자민당뿐만이 아니고 전후일본을 지탱해 온 자민당-관료-재계간 철의 삼각형이라는 지배구조가 붕괴한 순간이었다.

일본국민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장기불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자민당의 무능함, 관료제의 비효율성과 기득권 집착, 대대손손 선거구를 차지하면서 정치권력을 움켜쥐어 온 세습정치가들의 모습에 실망하였다. 고이즈미 구조개혁과 함께 진행된 일본형 신자유주의는 사회 곳곳에 빛과 그림자를 만들면서 전국적으로 빈부격차, 도농격차를 확대시켰다. 팽박해진 생활경제와 높아져가는 실업율, 자녀들 육아와 교육비에 지쳐가는 소시민들, 연금문제와 의료보험제도의 미비로 불안하고 불투명한 미래에 우울한 중장년층, 소자화와 고령화에 활



기를 잃어버린 지방은 자민당정권의 보조금삭감에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는 한번 민주당에 정권을 맡겨보자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선거혁명은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민주당 지지보다는 자민당 거부라는 네거티브(negative) 선거가 특징이었다. 유권자의 정책관심도 외교안보가 아닌 국내정치이었다. 외교안보는 별다른 선거 쟁점이 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총선용 매니페스토에서 5가지 약속을 들었는데 세금납비 근절, 자녀양육과 교육, 연금과 의료, 지역주권, 고용과 경제가 주요 내용을 구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 외교안보 정책은 포함되지 못했다. 더구나 2007년 매니페스토에서 민주당의 외교안보 비전은 '주체적인 외교를 확립한다'로 7개의 제언에 들어갔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아예 주요항목에서 누락되었다. 외교안보정책을 평가하여 투표한 유권자는 겨우 3~4%에 불과하였다.

외교안보정책이 주요 쟁점이 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민주당의 외교안보정책을 규율하는 큰 비전들이 부재한 채, 애매모호한 우애(友愛)외교라는 이미지로 포장되었기 때문이다. 외교비전, 정책브레인, 새로운 외교독트린과 구체적인 일정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민주당내 이념스펙트럼도 다양하여, 비핵3원칙과 아시아중시 외교를 내건 하토야마(鳩山由紀夫) 대표, 평화헌법 수호를 외치는 민주당 내 구 사회당그룹, 헌법개정과 미일동맹을 강조하는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二) 그룹 등, 다양한 목소리가 엇갈리면서 통일된 합의안을 제출하지 못했다. 더구나 진보적인 사민당과 연립여당을 구성하면서, 민주당은 명확한 외교 노선과 정책을 채택하지 못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기본적인 외교안보정책 방향은 매니페스토 안에 정리되어 있다. 1996년 창당 이래 민주당은 정책매니페스토를 만들어 왔으며, 총선거를 앞두고 명시된 외교비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외교면에서 긴밀하고 대등한 미일관계를 구축해간다. 2)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미일지위협정을 개정하여 미군재편이나 주일 미군기지를 재검토한다. 3)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축을 지향하며, 아시아외교를 강화한다. 4)통상, 금융, 에너지, 환경, 재해구원, 감염대책 등의 분야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협력 체제를 확립한다. 5)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으며, 화물검사를 실시하여(PSI),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 6)남치문제 해결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세계평화와 번영을 지향한다. 7)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가하며, 해적대책을 위한 활동을 실시한다. 8)핵무기 근절을 위하여 선두에 서서 활동하며, 테러 위협을 제거한다. 9)동북아시아 비핵화지대를 지향하고, 포괄적인 핵실험 금지조약을 조기에 발효시키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헌법논의를 지지한다.

## II. 심리적 탈미(脫美): 미일동맹의 변화?

얼핏 보면 다양한 내용이 서술되고 있지만, 민주당의 외교안보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대미추종에서 벗어나서 대등한 미일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아시아중시와 동아시아공동체를 지향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는 그리 쉽지 않다. 미일동맹





추종 vs 자주외교의 이중주는 시계추처럼 여러 번 오갔기 때문이다.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사토 에이사쿠(佐藤英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수상기에 자민당정권은 미일동맹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반면,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의 일소국교정상화,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英)의 일중국교정상화, 최근 후쿠다(福田康夫) 정권의 공명(共鳴)외교는 미일동맹에 안주하지 않고 아시아에의 접근을 시도한 자주외교 전략이었다. 1990년대 걸프전에서 엄청난 전비지원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받았던 일본외교는 국제공헌과 PKO파병을 통하여 독자적인 보통국가론과 자주외교를 모색해 왔다.

일본민주당의 외교비전에서 분명한 점은 미일동맹의 상대화를 자주 언급하면서 아시아중시와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외교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3년 하토야마 유키오와 다케무라 마사요시(武村正義)가 함께 창당한 신당사키가케는 리버럴리즘을 강조하였다. 정책론으로서 리버럴리즘은 비군사면에서 경제공헌을 중시하며, 일본의 총보수화를 막아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민주당내 주요 인사들의 심리적인 탈미(脫美)현상은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다. 하토야마 유키오 수상후보는 지난 8월 27일 뉴욕타임즈에 발췌 기고한 글 "A New Path for Japan"에서 아시아중시 외교를 천명한 바 있는데, 그는 금융위기를 미국식 시장경제가 불러일으킨 결과로 지적하였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무대신후보도 1960년 미일정부간 밀약으로 미군핵항모가 일본정부 묵인 하에 입항한 사실을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이 과정에서 미국의 일방통보적인 핵항모 입항이 드러나면 미국정부는 난처해질 수 있다.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간사장후보도 오키나와 북부 해안에 새로운 미군기지 신설에 반대하였다. 그는 미국이 동아시아에 제7함대가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해야 하며, 따라서 한국·일본에 일련의 기지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본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대외인식은 미국주도의 세계질서와 시장경제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보다 대등한 미일관계를 형성하여 일본외교의 자기발신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G2체제 중심의 국제질서에 매몰되지 않고, 대중, 대미관계에서 자주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토야마 수상의 비핵화에 대한 집념, 우에외교와 동아시아공동체, 미국 일국주의에 대한 의문제기 등은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다만, 심리적인 탈미가 얼마나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이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발사가 일본열도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의 핵우산과 밀접하게 연관된 비핵3원칙 문제를 얼마나 추구할 수 있을까. 일본 내에서는 북한핵에 대항하기 위한 핵무장론이나 비핵3원칙의 재검토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2009년 6월 19일자 산케이신문에서 니시하라 타다시(西原正) 평화안보연구소 이사장은 비핵3원칙을 완화하여 미국 핵항모의 일본기항을 공개적으로 용인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의 탈미형 자주외교 노선에 대하여 미국언론과 정부는 우려감을 표시하면서 일





본민주당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노골적으로 하토야마정권에 대한 경계감을 감추지 않았다. 워싱턴포스트는 하토야마를 경험이 부족한 정치인으로 묘사하고, 북핵위협 요인이 존재하는 데 비하여 일본이 미국과 결렬을 모색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하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실에서 아프간 등 미국의 핵심외교 순위에 일본이 동참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게재한 바 있다.

일본민주당 압승직후 미국무부 보도관은 미군기지의 오키나와현 내 이전결정과 괌 이전에 대하여 일본정부와 재교섭할 생각은 없다고 아예 못을 박았다. 미일양국은 2014년까지 후텐마비행장을 오키나와현내로 이전하고 미해병대 8천명을 괌으로 이동한다는 미군재편 계획에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일본 해상자위대가 인도양급유를 통하여 결정적이고 중요한 국제공헌을 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외교정책의 현실과 미국의 견제에 대하여 일본민주당도 조금씩 정책변경을 통하여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하토야마 수상후보는 금년 7월 기자회견에서 비핵3원칙을 현실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여 기존입장의 변화를 나타냈다. 해상자위대의 인도양급유 활동 연장반대는 정권공약에서 누락되었고, 미군지위협정도 개정착수에서 개정제기로, 미군기지 이전은 반대에서 재검토로 한발 뒤로 물러났다.

최종적인 민주당, 사민당, 국민신당간 연립정권 정책합의문의 결과는, 원칙과 유연성이 조화된 것이었다. 일단, 미일지위협정 개정과 주일미군기지 이전 문제는 원칙적으로 미국에 요구하기로 하였다. 사민당의 양보로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해외이전 추진은 공동합의문에서 제외되었다. 비핵3원칙을 재확인하고, 중국이나 한국과 협력하여 아시아국가의 신뢰를 얻어서 동아시아공동체로 나아가는 것, 북한에 대하여 핵개발과 납치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데 합의하였다.

### Ⅲ. 아시아중시 외교의 현실

일본민주당은 아시아외교를 강화하여 중국이나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각국과 신뢰관계를 회복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강고한 미일동맹에 비하여 한일관계와 일중관계는 협력과 갈등을 반복해 왔다. 한일관계에서 본다면, 자민당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와 경제협력, 1993년 고노(河野)담화에서 위안부문제 공식사과, 1995년 무라야마(村山)담화에서 전쟁을 통해 아시아국민들에게 끼친 피해 반성, 1998년 김대중-오부치(小淵) 한일파트너십 선언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각료들의 거듭된 망언, 야스쿠니 참배와 과거미화, 영토문제의 빈번한 제기과 같이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던 태생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일본민주당의 출발은 처음부터 매니페스토를 통하여 과거사반성, 아시아중시외교를 강조함으로써 이미 절반은 자민당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과거사문제, 역사인식, 야스쿠니 신사 A급전범 분사검토, 일본군위안부 보상문제에 있어서 일본민주당의 전향적인 인식은



한일관계를 크게 진전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특히 민주당내 주요인사인 하토야마, 간 나오토(菅直人), 오자와, 오카다 등이 친한파인 점은 더욱 고무적인 일이다. 오카다 차기외무대신은 외교정책과 환경문제에 경험이 풍부하고 한국, 중국과 폭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다. 정기적으로 주일 한국특파원들과 만나서 의사소통을 해온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일본민주당은 중일관계에서도 식품안전, 인권과 환경, 에너지, 군사력 투명화, 동지나해 가스전개발 등의 현안이 있는 만큼, 건설적인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갈 예정이다. 북한 핵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6자회담이나 중국이 보다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요청하고, 일본 민주당과 중국 공산당간 설치한 교류협의기구를 통하여 양당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의를 유지한다고 적고 있다. 자위권 행사는 전수방위에 한정하여 헌법9조에 따라 무력행사를 하지 않고, 유엔국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자민당의 아베 신조(安倍晋三)나 아소 타로(麻生太郎)수상이 가치관외교를 중시하면서 대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에 비하여, 민주당의 아시아중시, 하토야마의 우애외교는 실질적인 외교독트린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언론은 하토야마정권이 중일관계를 크게 호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토야마 수상후보는 선거기간 중 [Voice]라는 일본잡지에 유럽통합의 이상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10년 이상 논의를 거쳐서 아시아 공통의 통화를 실천해야 하며 정치적 통합까지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럽통합을 모델로 한 동아시아공동체의 구축을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다분히 이상적인 외교정책이 얼마나 현실화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미일동맹에 대한 일본인들의 집착, 한일과 중일간 영토분쟁, 보수우익과 산케이신문·후지테레비와 같은 우파언론, 관료조직의 저항을 물리치고 국내개혁과 외교비전을 궁극적으로 달성하기에는 장애물이 지나치게 많은 현실이다.

민주당내 외교안보 분야에서 이념스펙트럼은 분산되어 있으며, 이를 통합하기에는 엄청난 정치적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 오카다 외무대신 후보는 전후일본의 구상이었던 평화헌법을 존중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는 매우 소극적이다. 대테러특별조치법에 반대한 요코미치 다카히로(横路孝弘)나 일본교직원조합과 연계된 고시이시 아즈마(興石東)의 진보적 교육정책,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반대하는 리버럴모임의 대표인 히라오카 히데오(平岡秀夫)는 대표적인 호한파이다. 그는 방위성승격에도 반대한 바 있다.

한편, 우파인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는 일본외교의 기축은 미일동맹이며, 평화헌법 제9조에 자위권을 명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서 대조적이다. 당내 소장파인 호소노 고시(細野豪志)는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주장하고 A급전범의 분사에도 반대하고 있다. 개헌과 야스쿠니 참배를 주장하는 하라구치 가즈히로(原口一博)도 있다. 보수파의 선봉인 마쓰바라 진(松原仁)은 납치의원연맹 사무국장대리로서 남경대학살이나 종군위안부 문제를 전면부정하고 있다. 도쿄재판이나 평화헌법을 승자의 강제물로 간주하는 우익입장과 거의 다를 바 없다.



대북문제에 있어서도 강경파와 온건파가 혼재한다. 민주당은 납치문제에 대하여 매니페스토에서 국가책임으로 전력을 다해서 해결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핵개발과 납치문제를 하나로 해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압력파도 있고, 핵개발논의에 납치문제를 연계시킬 필요가 없다는 온건파도 존재한다. 하토야마대표는 구체적인 대북정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대화를 중시하고 있다. 북한우라늄 농축시험 성공보도에 대하여 오카다 외무대신 후보자는 핵개발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대북제재를 계속해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동아시아공동체론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이상적이다. 켜켜이 쌓인 한일간, 한중간 갈등요소를 풀어내고 협력과 통합을 추진하기에는 갈 길이 너무 멀다. 동아시아공동체, 동북아협력의 실패전철은 노무현정부에서 이미 우리가 먼저 겪은 것들이다. 고이즈미수상의 야스쿠니 참배로 한일 셔틀회담은 중단되었다. 현직 일본수상이 5년 재임기간동안 중국에 가지도 못했고, 제대로 된 중일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도 못했다. 경제협력면에서 민주당은 미국,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농업단체의 반발로 공약을 부분 수정한데다, 한국제조업이 일본에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일본민주당의 미래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달려 있다. 인도양 급유 활동을 계속할지 당장 내년 1월까지 결정해야 하며, 후텐마기지 이전문제, 집단적자위권의 해석변경 등은 훨씬 중요도나 우선순위가 높은 쟁점들이다. 내년 7월 참의원선거를 생각한다면 진보적인 사민당을 배려하면서 참의원내 연립여당을 유지해야 한다. 연립여당간 합의가 깨질 경우, 정국운영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민주당은 명확한 외교비전과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당내 이견과 연립여당간 정책을 수렴하지 않으면 안 된다.

#### IV. 2010년과 한일관계

일본민주당의 집권은 한국외교에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미국 민주당의 집권과 미-중 G2체제의 가시화,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발사, 일본민주당의 등장과 아시아 중시외교, 미국-북한간 대화 등, 대외정세의 변화가 눈앞에 임박해 있다. 갈등심화로 인한 남북대화 부재극복, 미국 민주당이나 일본 민주당의 새로운 외교전략과 대응책 마련, 한일양국 정치인들의 세대교체이후 대화채널의 구축 필요성 등은 한국외교가 기존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시기에 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국외교는 새로 등장한 일본민주당과 어떻게 양국관계를 설정해야 할까. 첫째, 동아시아 공동체, 아시아 중시 외교를 지향하는 일본민주당의 외교정책이 양국관계에 있어서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아시아공동체는 한국이 이론과



정책면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양국이 협력하여,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 특히 동아시아가 중국 중심의 패권시스템이 되지 않도록 한일양국이 적절하게 견제해가야 한다.

둘째, 한일강제합병 100년인 내년 2010년에 대비하여 양국 간 정책대화를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 바람직한 모습은 일본이 한일합방 100년을 사죄하는 담화를 국회에서 결의하고, 재일교포 지방참정권 법안을 통과시켜 가시적인 성과를 먼저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과거 100년에서 한일미래 100년으로 화답하고, 빠르면 2011년경 천황의 방한을 추진해갈 필요가 있다.

셋째, 일본민주당의 개혁과정을 관찰하면서 양국 간 공동협력과 아울러 한국 사회와 경제시스템의 대안을 모색해가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사회의 개혁을 위한 민주당의 정책정강은 한국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한일양국이 활발한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금융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2009/09/12)

